목포 정치권, '무안반도 통합' 필요성 제기하며 다시 '군불'

김원이 "RE100산단 건설 발맞춰야"

"미래신성장 사업 메카 절호의 기회"

목포신안통추위, 국정委에 통합제안서

1994년 이후 번번이 실패…귀추 주목

이재명 정부가 'RE100 산업단지' 추진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목포 정치권에서 다시 '무안반도 통합'의 필요성을 적극 제기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목포)은 13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몇 년간 지지부진했던 목포-무안-신안 통합 문제, 이제 책임 있는 단위가 모여 마무리를 지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10일 이재명 정부가 전남 서남권을 구체적으로 지칭하며 RE100 산업단지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면서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목포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렸던 RE100 전용산단 건설이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책사업으로 채택된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그는 "RE100 산업단지 추진으로 전남 서남권은 새로운 비약의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며 특히 "목포는 해상풍력사업의 중심 배후도시로 전남 서남권은 RE100 기업 유치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세수 증대, 그리고 미래 신성장 사업의 메카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그동안 22대 국회 산자위 간사로 활동하며 지난 2월 본회의를 통과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고, 또한 산업자원특허 법안소위 위원장으로서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여야 협의로 통과시켰다면서 "RE100 산업단지 추진을 위해 전남은 이미 준비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의원은 "RE100 산업단지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해 제안드린다"며 "무안반도 통합 문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하자. 서남권이 힘을 모아 이재명 정부의 국책사업을 지역 발전의 기회로 제대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무안반도가 통합돼야) 전남 서남권 일대를 대한민국 RE100 거점 지역으로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넓은 마음으로 통합 논의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산업부, 기재부, 국토부 등 관계 부처 및 전문가 등으로 TF를 구성해 사업을 구체화하고 가칭 'RE100 산업단지 및 에너지 신도시 조성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모두 제가 일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만큼 전남도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지난 8일 목포시청에서 국정기획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국민소통 프로그램 '모두의 광장'에서는 목포신안통합추진위원회가 '무안반도'의 행정 통합을 촉구하는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3개 시·군 단체장 선출 후 무안반도 통합을 논의하면 발전 동력을 실기할 수 있다"며 "무안반도 주민들이 통합 문제를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새 정부가 정책적으로 뒷받침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목포·무안·신안 등 무안반도 통합은 김영삼 정부 때인 1994년부터 논의와 결렬을 거듭해왔다. 3개 지자체는 통합을 위해 주민투표 3차례, 여론조사 3차례를 거쳤으나 번번이 실패로 끝났다.

2007년 7월 목포·무안·신안 통합이 다시 부상했으나 흡수 통합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무안과 섬만의 특수성을 인정받으려는 신안 등의 여론 때문에 또 다시 수포로 돌아간 바 있다. /김진수 기자

광주시가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서울에서 열린 '제14회 인구의 날' 행사에서 저출생 대응과 양육 친화환경 조성 등 인구 위기 극복 노력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광주시 제공〉

광주시, 인구의 날 '저출생 극복' 국무총리 표창

육아휴직 업무대행수당 등 성과

광주시는 지난 11일 보건복지부 주관 '제14회 인구의 날 기념식'에서 저출생 대응과 양육 친화환경 조성 등 인구위기 극복 노력의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광주시는 저출생 위기 속에서 '엄마·아빠가 맘 편한 도시, 아이키움 올 인(All in) 광주'를 목표로 올해까지 총 51개 저출생사업을 추진하며 일·가정 양립과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했다.

민·관 협력사업, 저출생 인식 개선 등 18개 사업을 통해 결혼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을 이끌어낸 성과를 인정받았다.

대표 정책인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는 '지각장려금'이라는 별칭으로 시민들에게 호응을 얻었으며 2024년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도 우수 정책으로 소개됐다. 이 제도는 초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가 오전 10시에 출근할 수 있도록 유연근무제를 도입해 자녀 등교와 돌봄의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또한 2019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육아휴직 업무대행수당'은 올해부터 고용노동부 전국 사업으로 확대되는 등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 선도 모델로 자리잡았다. /변은진 기자

金지사 "호우 인명피해 없게 현장 선제 대응"

김영록 전남지사는 13일 도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긴급 집중호우 대처상황보고회를 주재해 "산사태 우려지역, 야영장 등 현장 중심으로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응해 단 한건의 인명피해도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김 지사는 ▲산사태 우려지역 적극 사전 통제·일몰 전 사전 대피 ▲계곡·하천변·해수욕장 주변 야영객·피서객 신속 대피 유도 ▲'선조치 후보고' 원칙 철저 준수 ▲기상 상황과 지역 실정에 맞춘 맞춤형 홍보 강화 등을 특별 지시했다.

전남도는 전국적으로 시작된 호우에 대응, 인명·재산 피해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총력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김 지사는 "꼼꼼히 추진해 온 재난 예방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되도록 시·군과의 유기적인 협력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재정 기자

광주 공공기관 여성 임금 남성보다 평균 12% 낮다

市출자·출연기관 20곳 임금 격차 분석

군복무 경력 등 구조적 요인 복합작용

광주시 공공기관 여성 근로자의 평균 임금이 남성보다 12.1%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역 출자·출연기관 20곳을 대상으로 2024년 성별 임금 격차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누리집에 공시했다.

이번 공시는 공공 부문이 선도적으로 임금 구조의 성평등을 실현하고 민간 부문까지 긍정적 영향을 확산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특히 성별 간 임금 차이를 수치로 명확히 공개함으로써 제도의 투명성을 높였다.

분석 결과, 20개 공공기관의 전체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근로자 2천260명 중 여성은 665명으로 전체의 29.4%를 차지했다.

여성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남성보다 연간 12.1% 낮았다.

기관별로는 광주교통공사(29.7%), 광주테크노파크(22.2%) 등에서 격차가 두드러졌다.

이 같은 차이는 상위 직급에 남성 인력이 집중된 인사 구조, 군 복무 경력 인정에 따른 근속연수 차이, 초과근무수당 지급 차이 등 복합·구조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광주시는 이번 분석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명시적인 임금 차별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2년마다 성별 임금 현황을 지속 공시해 불합리한 요소를 식별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영동 여성가족국장은 "성별 임금 격차 공시는 투명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출발점"이라며 "공공기관이 먼저 실천, 민간 부문에도 긍정적 변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성별 임금 격차 개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2023년 7월 '성별임금 격차 공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는 채은지 광주시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광주시의 성평등 공공 경영을 강화하는 기반이 됐다. /변은진 기자

시의회 환복위, 장애인 구강진료 점검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지난 11일 광주·전남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방문해 장애인 구강 진료 서비스 제공 현황을 점검했다.

광주·전남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치과 진료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통합적인 구강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진정요법 및 전신마취 진료가 가능한 전담 진료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전문 인력을 통해 연간 9천여명의 장애인이 진료 혜택을 받고 있다.

이날 현장 방문에서는 시설 운영 현황을 비롯해 진료 대기 기간, 전문 인력 확보 문제, 운영상 애로사항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최지현 위원장은 "장애인의 구강 건강은 중요한 복지 영역"이라며 "공공 치과 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통해 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관심과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변은진 기자